전남 김 양식장 등 타르 피해 눈덩이

■ 피해상황·보상절차

신안·무안 극심… 7~10일 사리기간 고비

피해 입증 근거 자료 첨부해 대책위에 접수

환경 피해·방제조치 비용 등도 보상 청구 가능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전남 연안 김 양식장 등의 수산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얼마나 많은 타르 덩어리가 더 밀려올 것인가, 보상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전남은 수산물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곳이어서, 직접적인 기름유출 피해를 본 태안보다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특별재난구역 지정이 절실하다.

당장 시급한 기름 방제보다, 피해 입증이 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행정·재정·법률 지원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얼마나 더 밀려오나=해양경찰청과 전남도 등 방제당국은 구랍 30일부터 3~4일간 강한 북서풍을 타고 영광 등 전남 서해안에 집중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방제당국은 이후 타르 덩어리 유입이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연안에 밀려온 타르 덩어리만 제거하면 수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7~10일까지 나흘간이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사리'여서 이 기간 동안 바다 밑에 가라앉아있던 타르 덩어리가 연안으로 더 몰려올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이 경우 연안 양식장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피해액이 수천억원대를 상회할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6일 현재까지 전남 연안에서 수거된 타르 덩어리는 940t으로, 아직까지 섬지역 등에 남아있는 것 등을 합하면 전체 원유 유출량 1만9천t의 10%인 1천t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청 해양오염관리국 최홍기 사무관은 "타르 덩어리가 유독성은 없으나 김, 미역, 굴 등 수산물에 달라붙을 경우 먹을 수 없게 된다"며 "사리 기간을 지나봐야 알겠지만, 더 이상 전남 연안으로의 유입은 없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피해 보상 어떻게=전남도는 7일부터 각 지역 어촌계와 수협을 중심으로 '수산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수산피해 접수에 나선다. 양식어민들은 이에 따라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첨부해 피해 접수를 하게 된다.

이후에는 피해대책위원회와 보험회사가 협의해 제3의 전문 조사기관을 선정해 정확한 피해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가해 선박회사에 보상을 청구하게 된다.

주요 조사 대상은 피해가 극심한 신안 6천300여ha와 무안 770여ha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타르로 인한 김 양식장 등의 피해에 대한 어민들의 주장과 보험회사 조사 내용 등이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커서 어민들의 주장이 그대로 수용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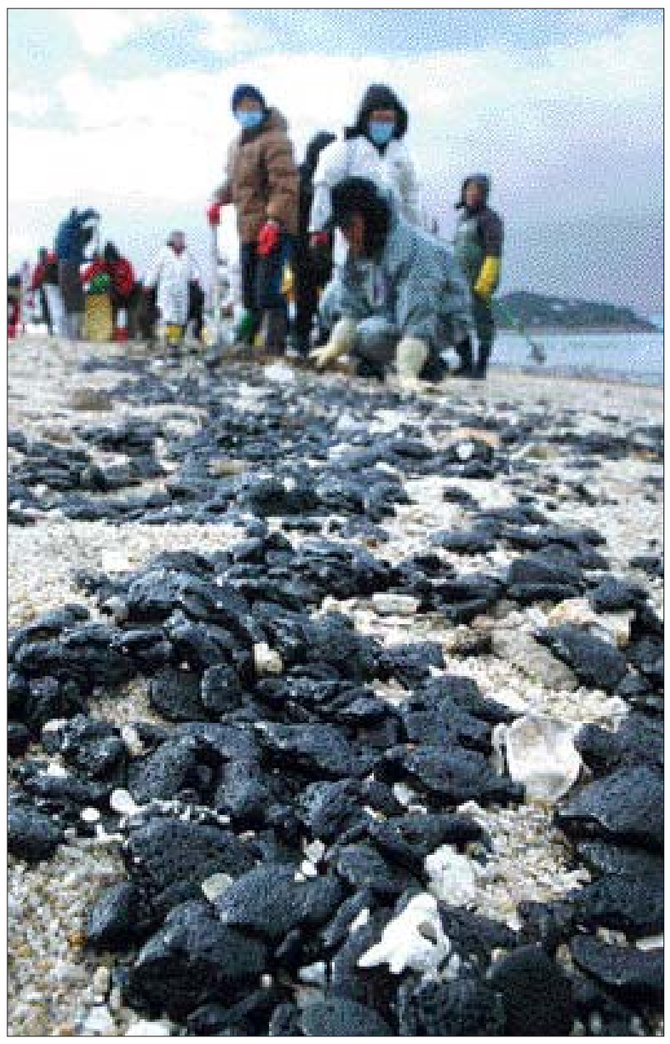
보상 절차는 협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가해 선박회사나 보험회사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법률지원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학과 교수는 "지난 1989년 알래스카 연안에서 발생한 엑손발데스호 기름유출 사고의 경우 피해총액보다 많은 5조원이 어업 피해 보상과 방제·복구 비용으로 지급됐으나, 지난 1995년 여수 씨프리스호 기름유출 사고에는 736억원의 어민피해에도 불구하고 500억원이 어업권 피해보상과 방제비용이 지급됐을 뿐이었다"며 "이번에는 민사피해보상제도 보완 등 법률지원도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P&I)와 국제기금(IOPC Fund)가 인정하는 피해 유형=유류 유출로 발생한 직접피해는 물론 간접피해와 순수 경제적 손실 및 환경 피해, 방제조치 비용 및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손해는 가해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며 특히 간접 피해나 경제적 손실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선어업 ▲양식·축양어업(해조류 및 어패류 폐사, 어가하락, 생산 지연) ▲정착성어업(폐사, 감수, 품질저하, 채취금지 조치 손해) 등이 보상 대상이다. 방제대책에 필요한 교통비, 통신비, 회의비, 직원의 초과 근무수당 등도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에 따라 ▲피해현황에 대한 비디오촬영▲피해수산물 채취해 라벨을 붙여서 냉동보관 ▲개인별 위판·판매실적 자료 확보 등 객관적인 피해 증거를 가능한 많이 확보해 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살 길 막막하네요 지난 2일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송계마을 해안에서 마을 주민들이 바다에서 밀려온 타르 덩어리를 제거하고 있다. 김 양식과 어촌체험관광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주민들은 타르 피해로 인해 생계가 막막해졌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방치되는 '섬 타르' 서해 절경 훼손 위기

타르의 내습으로 천혜의 자연과 풍광을 지닌 전남지역 서해안의 절경이 크게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

6일 현재 전남도와 어민, 자원봉사자들은 총 940t의 타르 덩어리를 수거했다.

하지만 이들 타르는 신안군 임자와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염산면 두우리 등 대부분 접근이 용이한 연안이나 섬 지역에서 수거된 것이다.

전남지역은 태안과 달리 절경의 섬이 많아 총 1천964개에 이르며, 이중 서해안에 1천211개가 집중돼 있다.

섬의 분포에 따라 해안의 굴곡이 심한 지역이나 비교적 크기가 작은 섬의 타르는 제거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타르 양과 제거의 용이성 등 작업의 효율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자원봉사자를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 무인도에 대해서는 피해 상황 조차 제대로 파악할 겨를이 없는 상태다.

지난 1995년 여수 소리도 해안에서 발생한 씨프린스호 사고로 전남 남해안의 청정지역이 오염, 원상회복(?)하는 데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렸던 점을 감안해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남도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들을 타르 유입이 많은 연안 지역에 집중 배치해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면서 "섬의 타르는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수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4년째 제자리… 정부 의지가 중요

'이명박 시대' 지역현안·공약 점검

❷ 광주 R&D 특구 지정

사업비 4,740억 확보가 최대 관건

노화硏·원자력 의학원 설립도 관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광주 첨단산업단지 R&D 특구 지정 및 육성' 약속은 광주시가 가장 주목하는 공약사업 가운데 하나다. 이 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4년 동안 결실을 보지 못했던 광주시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는 "광주의 주력산업인 광산업의 핵심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전자, 디지털 가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광주 첨단단지를 R&D 특구로 지정,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나노·광·신소재 기술 등 연구개발시설이 밀집해 있는 첨단과학산단(9천931㎡)이 R&D 특구로 지정·개발될 경우 '첨단산업 도시' 광주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내 유일의 광산업 집적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산업적 기반이 여전히 취약한 광주의 산업체질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D 특구'로 지정될 경우 특구육성 자금을 정부로부터 집중 지원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혜택이다. 또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칼리지 폴리스 조성▲정주환경이 조성됨으로써 국내외 연구개발센터 및 각종 첨단기업의 유치도 쉬워져 첨단과학도시로서 안정적인 발전과 성장을 기약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광주시가 광주 R&D특구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광주 R&D특구 추진기획단을 출범시키는 등 4년째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이 사업은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4천74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점을 부담스러워 하는데다 '대상지역에 기반 시설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미루고 있다.

이와 함께 시가 올해 '실버피아'(Silverpia· 노인천국)를 광주에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과 맞물려 '국립노화 연구소' 유치 공약도 눈길을 모으고 있다.

시는 국립노화연구소가 설립될 경우 광주에 실버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는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연구소는 노화의 원인규명과 진료기술 및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기관으로 광주시가 장기비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산업단지의 핵심시설이 될 전망이다.

시는 노화연구소가 설립됨으로써 첨단 의료기기 및 신약개발과 관련한 산업·의료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광주를 '실버산업'의 메카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다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 설립' 공약도 눈에 띈다. 원자력 의학원은 전문 암센터와 암 예방검진 센터를 갖춘 첨단 방사선 의학의 선도기관이다.

이병록 광주시 기획관리실장은 "R&D 특구 지정사업과 국립노화연구소 설립은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차기정부를 상대로 대통령 공약사업임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특구지정의 당위성을 설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